

| 특별대담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사회 변화와 사회적 대화

- **일시** 2020년 7월 24일
- **장소** 경사노위 7층 중회의실1
- **참석**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장흥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회**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배석** 김양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력홍보팀장
안숙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무관
- **정리** <참여와혁신> 정다솜·백승윤 기자
- **사진** 이현석 포토그래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은 멀게만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내 감염자가 30여 명 대에 머무는 등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대체로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2차 대 유행까지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경기 침체로 인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위기를 동시에 체감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및 종식은 물론 현재진행형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차제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경제사회가 소홀했거나 혹은 미뤘었던 부분을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새판짜기'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

정흥준 오늘 대답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개될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해 경제와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기 대응치방과 중장기 구조 개혁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대응에 대한 기본 열개도 마련해 보는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분야에서 조예가 깊은 전문가 분들을 모신만큼 명쾌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복지 측면에서 오건호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노동이나 사회의 측면에서는 장흥근 박사님이, 경제적인 측면은 박철성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박철성 현재의 상태는 확실히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심각하고, IMF 외환위기 때까지 정도는 아닌 중간 정도 상황이라고 봅니다. 외환위기 때를 보면 1998년에 GDP 성장률이 -5.1%였다가 1999년에 11.5%로 올라서 거의 199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확 내려갔다 확 올라가는 V자 형의 변화가 있었고요. 취업자 수는 1998년도에 1년 전과 대비해서 150만 명 정도 감소해서 당시 충격이 엄청났죠. GDP 성장률이 -5.1%에 1년 만에 15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니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도 충격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공포에 떨 정도는 아니었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는 잘 넘어간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3.3%인데 1998년에 -5.1%였어요. 한국은행 예측으로



는 연말까지 코로나19가 이어지면 -1.8% 인데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성장률만 보면 외환위기급은 아니지만 2008년보단 힘들어요. 고용 측면에서 봐도 이번에는 취업자 수는 많이 안 줄었는데 일시휴직자가 100만 명 이상 늘었잖아요. 종합적으로 외환위기에 이은 두 번째 정도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거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는 봐야 합니다.

정흥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IMF 외환위기에 견줄만 한데 고용지표나 경제지표로 봤을 때는 충격이 덜한 정도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흥근 박사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흥근 지도 박 교수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감합니다.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에게서는 스쳐지나간 정도였고, 또 나름대로 그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측면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19 위기가 외환위기급의 충격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환위기 때는 거의 V자로 충격과파가 굉장히 깊고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양을 보였고, 그러한 위기가 상당 부분 우리 내부적인 원인에 기인한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는 우리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에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촉발되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엄청난 교란이 오고 생산과 유통과 소비, 이런 경제 전 측면에 있어서 충격파가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 회복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1차 유행으로 그칠지 2차, 3차 유행으로 이어질지조차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고용, 사회적 위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하던 초창기에 K방역이라는 성공적인 모델을 통해 잘 관리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실제보다도 체감적으로 적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녀본 산업 현장의 체감지수는 언론에 보도되는 통계지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흥준 아직 코로나19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는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스쳐지나가는 듯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초기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의 속도가 조금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위기를 체감하는 데는 덜 민감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도 말씀해주시죠.

오건호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만약 지금이나 연말 정도까지 해서 코로나를 잡을 수 있으면 다시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더 지속된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경제위기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전에 위기들은 대부분 이른바 경제체제 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금융이든 부동산 거품이든 이런 건데, 이번에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요인이 경제영역 바깥에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더 반응해버리면 끔찍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위기의식이 더 큰 것 같아요. 유동자금을 공급하고 정책지원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바깥 요인에 의해서 교란되고 있다 보니까 대책을 세우면서도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잡히겠지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도는 지금 진단하기 어렵지만 정서적 불안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긴급자금을 지원받고 우리 안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넘어섰는데 지

금은 전 지구 영역으로 지구 경제생태계를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워낙 해외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여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K방역으로 잡더라도 다른 곳이 더 번져가고 있어서 그게 하나의 불안요인이죠. 또 하나는 IMF 때는 재벌기업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고 거기서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건데, 이번에는 전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나 고용 등에서 양적수치로 보이지 않는 이른바 전체적인 경제생태계가 교란되다 보니까 가장 주변부에서 이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불안정 노동계층들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 위기가 향하는 계층이 지극히 주변, 취약 노동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 대응에서 심각성이 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책, 적절했나

정흥준 네,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전 위기의 원인과 다르게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예를 들면 바이러스라는 쉽게 통제되지 않는 위기가 있고 이게 경제적 불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하나와 위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높은 계층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상당한 위기에 있고 위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위기가 언제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50조 원 정도의 지원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200조 원이 금융대

코로나19시대 이후
경제사회 변화와
대응의 기본 열개 마련

출과 관련된 것이었고 50조 원이 고용노동 정책들이었는데, 여기에 최근에 5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런 정책들이 현재의 위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한 건지 또는 정부 대책의 허점이나 문제점은 없는 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건호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결국은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즉, 기업을 지원하든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지원대책에서 핵심 영역은 아닙니다만 저는 복지 분야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쪽에 보면 광범위한 사회복지 이용자들이 있는데 시설을 사실상 셧다운 시키면서 코로나에 대응합니다. 지금 돌봄서비스가 오랫동안 중단되어서 복지부가 7월 20일부터는 조금 열라고 했어요. 취약한 계층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금 거의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을 해결했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 서비스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지면 그 기간 동안 뭘 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 방치 혹은 잊혀진 채로 남겨진 겁니다. 직접 생산 영역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는데 그와 연관된 취약계층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비어있어요. 그동안 복지체계가 이런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이번 기회에 전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홍근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수단의 규모도 평상시와는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경제·사회·고용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본다면 각종 지원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지원을 활용해서도 성과가 좋게 나오는 걸로 보면,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들,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화

되어 있던 수단들, 예컨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이라든가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갔어요. 전통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곧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프리랜서, 특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이나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서 신속하게 집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위기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선례, 좋은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흥준 우리나라가 250조 원을 풀었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금액을 떠나서 이번에 차별성을 보인 것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조금 더 정돈한 거죠. 상향 조정하고 범위도 확대하고 기간도 늘렸어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소득보전을 했던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실험이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박철성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은 건 확실히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죠. 문제는 최근에 제조업쪽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2분기에 제조업이 -10% 성장을 기록했어요. 자동차산업은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생산이 20% 감소했고, 그와 연결되어서 철강산업도 매우 어렵고 정유산업도 어렵습니다. 제조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나라 제조업 대부분이 국외 수출 중심의 산업기반을 갖고 있는데 세계 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지원금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그것도 어렵죠.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나오든지 백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부 대응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세계 경기에 달려 있어서 금융지원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게 지금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IMF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된다는 해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체제 자체의 문제이기에 어렵죠.

장흥근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노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건호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논의로도 발전하고, 특고·프리랜서 지원 등 나름대로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해주셨고 동의해요.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지만 이 정책을 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과제, 한계들도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번에 특고·프리랜서 지원에서도 100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1.5배 된 거거든요. 지원받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묘하게 서류 한 장 차이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답니다. 초기에 긴급재난지원금 70% 논쟁에서도 그렇고 대상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즉 대상을 가릴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의 인프라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위기대응 시스템
갖춰진 나라는
맞춤형 지원 정책

긴급지원 과정을 보면 유럽 같이 위기대응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들, 기존 복지급여나 실업지원제도가 갖춰진 나라들은 맞춤형 방식의 지원이 있어요. 그게 재정대비 효과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영미권 나라들은 현금을 대규모로 푸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우리는 쉬웠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은 다 주고 다른 지원은 맞춤형도 있었죠.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등장할 수 있기에 이번을 교훈 삼아서 이런 위기에서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제도의 문제인지 소득과약 문제인지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문제인지 위기 대응 체계를 긴급하게 정비 보강해야 된다는 과제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는 노동시장의 모습은

정흥준 현황과 정부 대책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노동시장의 변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 등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죠. 또 온라인 회의나 재택근무를 통해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관광이라든지 항공 등의 산업분야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들은 산업의 변화하고 동반해서 같이 가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예측되는 노동시장 변화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흥근 사실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쭉 진행되어 오던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면서 가속화되고 더욱 더 전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 이야기는 길게 보면 10년도 더 된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니까 확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기계화, 자동화와 같은 기술혁신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오랜 논쟁과 맥락이 닿아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기술이 혁신되고 자동화되고, 로봇이 생산현장에 도입될수록 점점 더 인간 노동의 설자리가, 일자리가 줄어들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그에 못지않게 많았다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가 보여준 역사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시기를 장단기로 나누어서 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기술 혁신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일자리 총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심화될 때, 과연 일자리 총량의 변화라든가 일자리 구성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의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고학력의 고숙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난다는 거예요. 산업현장에 가보면 고급지식,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인력을 찾지 못해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업장도 많아

요. 그런데 과거의 자동화, 로봇과 달리 인공지능에 의한 디지털 전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중간 숙련 정도, 그리고 중급 정도 학력 수준의 일자리들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철성 장흥근 박사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겨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상당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고,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일어나고 있던 변화들이 어떤 부분은 빠르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같은 것도 약간씩은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퍼지는 효과에 의해서 눈에 확 드러났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보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전달, 온라인 판매 등이 가속화되는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결국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들 속에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생산성의 향상이라든가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인 거죠. 세계 경제체제상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효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와 업주들은 이득을 보는 거고, 저숙련 저학력이거나 중숙련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회안전망에 중요한 과제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단순한 노동시장의 관계, 예를 들어 공장 같은 노동시장 관계가 이제는 다면적 노동시장 관계로 변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심각한 과제가 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갖출 것인가

정흥준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 같은 것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꺼내기도 어려운 얘기였는데, 지금은 정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산재보험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보장 체계가 있을 텐데,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돼야 할지 오건호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오건호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복지 발전의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2010년부터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무상급식으로 복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보편복지에 대한 권리인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정책은 보편적으로 추진했지만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다보니 사회안전망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왔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못 세워왔고 사실상 방치됐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완전히 새로운 전환 계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 문제를 비판적인 전문가나 당사자가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국정운영자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제 복지의 양적 확대에서 사각지대 대응에 주목하는 2단계에 들어선 거지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등장했던 게 전국민고용보험제입니다. 제가 고용보험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좁힌다는 고용보험적 영역의 효과도 있지만 나아가서 기존 사회안전망 체제의 기반이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작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고용 지위가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취업자면 다 복지 체제에 들어가는 게 소득기반입니다. 고용보험이 소득기반으로 사회보장 체제를 전면 전환하는 첫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바로 국세청에 등록·신고돼서 사회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행정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어요. 지금은 소득이란 게 1~2년 전 소득이다보니까 민원이 많았거든요.

이제 사각지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어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제도를 조금 바꾸고 정부가 지원 하는 등 미시적인 대책이었는데, 소득 기반으로 바꾸면 사회안전망의 설계 기반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가능하냐는 건데, 지금은 소득기반으로의 완전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소득과약, 매출과약 등의 인프라가 갖춰졌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과세행정 당국이 아니고 복지관리 당국으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코로나19가 사회안전망 발전에 중요한 도약 계기가 되는 거지요. 앞으로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서 소득기반의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진일보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본소득이 등장한 것도 취약 노동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기존 체제의 부조리 때문이었거든요. 즉, 현 체제가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니까 기본소득이 등장한 건데, 이런 소득기반의 전국민 사회보장 체제가 갖춰진다면 기본소득과도 생산적인 정책 경쟁이 진행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우리가 갖출 것 같습니다.

정흥준 일단은 코로나19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게 소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건데 그럼 주로 고용보험을 얘기하신 건가요?

오건호 고용보험으로 시작을 하는데, 전국민고용보험은 하나의 소재일 뿐이고 전국민고용보험제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장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조세 기반의 복지 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흥준 소득기반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슈가 있었다가, 이제는 가능할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슈가 있는 건 소득기반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과 매칭해서 할 것인지의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박 교수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박철성 제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이어서 여기서 사회안전망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요. 저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경제학 전공이다 보니까 재정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반 설계라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과 혜택의 괴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담은 낮으니까 혜택이 많으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거고, 거꾸로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강화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안전시스템이 부담보다는 혜택이 더 높은 형태로 돼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지적들을 하시죠. 고용보험, 건강보험도 그렇지만 특히 국민연금은 초기에 설계할 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담과 혜택 간의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문제가 지속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사회안전망 개선에서 꼭 감안해야 할 부분은 재정건전성

경제학적 측면에서 길게 보면 불균형이 어느 순간 해소가 돼야 하는데, 불균형을 계속 쌓아가면 우리나라에 빛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빛을 누군가 감당해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책임지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봤을 때는 어려운 주문이라고 봐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렵죠. 저는 사회안전망 개선을 할 때 꼭 우리가 감안할 부분은 재정건전성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미래세대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고 후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부담 방안이 준비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흥근 지금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를 고용보험으로 한정해서 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약 45%, 1,236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상태이고, 법적으로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가 378만 명이예요. 1차적으로는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들지 못한 미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종속적인 노동이 아닌 특고,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안정망 체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른 정규직 중심의 안전망이 아니라 소득 활동, 취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고용안정망을 만들어가는 게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그리고 기존의 사회보험 적용 징수 체계는 불가피하게 개편하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일자리구조 하에서 장·노년층이 더 많은 혜택을 계속 누리겠다고 고집하면, 결국 그 부담을 청년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 됩니다. 1950~1960년대 출생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연금 혜택을 받는 시기에 해당하는데,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 규모도 그렇고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일자리의 질, 임금의 수준이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기성세대 일자리에 비해서 열악한 일자리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안전망, 고용안정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이 아울러서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이 발전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건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면 당연히 재정이 소요되는데 특히 복지 영역에서는 두 파트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파트는 제도 그 자체 내에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재돼 있어요. 그 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 해 조달하는 부과방식이거든요. 만약 실업급여 지출이 많아지면 어떻게든 보험료를 높일 것이고, 건강보험도 다음해 지출을 예상해서 건보료를 책정하고, 산재보험도 기금이 줄어들면 조정하겠죠. 일반 복지 분야의 생계급여나 기초연금도 그래요. 만약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든 인상 결정자들이 재정을 동시에 마련하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50만 원을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급여가 추진됩니다.

반면 연금은 지금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돈을 조달하지 않아도 돼요. 소득대체

을을 높게 잡아도 지출은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에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당시 세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구에 비해서도 수지 불균형이 크고 보험료는 덜 내고 있지요, 특히 인구구조는 앞으로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재세대가 자신이 맡아야 할 재정 책임은 방기하고 있어요. 부과방식 재정구조의 사회안전망을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현 세대의 재정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판 뉴딜,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흥준 세 분의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소득기반 전환을 통한 적용의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항상 생각하며 가야 한다는 것이고, 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현재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들이 뭔가 다른 노력을 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은 단순히 보면 고용보험 확대 측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얼마 전 정부가 사회안전망 기초 하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뉴딜, 또 환경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린 뉴딜을 얘기하면서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이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큰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뉴딜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철성 뉴딜 정책이 딱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나온 건이라기보다 그 전부터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책 발표한 걸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정책 제목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데이터댐’, ‘그린 리모델링’ 같이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미국 정책 같아요. (웃음)

경제학적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프레임이 진

짜로 효과적인 프레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 이런 게 반복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는 게 근본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린 부분에서는 정부가 할 게 많다고 봐요. 친환경의 경우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개입이 필요하죠. 그런데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 되도록이면 민간이 나서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지원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그린 부분은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필요하지만 디지털 부분은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건호 혹평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뉴딜이 아닌 것을 가지고 뉴딜이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뉴딜'은 말 그대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내자고 하는데, 그건 기존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손을 잡고 가자는 것이 뉴딜 아닌가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시대적 과제가 설정돼야겠죠. 물론 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기후위기와 불평등입니다. 기존 정책 흐름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특단의 정책 조합을 통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기후위기는 그린 뉴딜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린 뉴딜을 보면 목표가 없어요.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또 단계별 목표도 애매해요. 시대적인 과제라고 말하지만 내용이 부실하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은 양극화 체제에서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집 없는 사람,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미약해요. 획기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사

관계에서 점차 개별화될 것이고 그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노동규율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업종별 교섭권을 법제화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낼 수 있는 제도적 제안도 없어요. 결국 전체적으로 전환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장홍근 한국판 뉴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모호한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비상대책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준비했던 새로운 경제 및 산업정책인지, 혹은 둘이 합쳐진 건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기 대응책의 성격과 아울러서 하나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게 섞인 것 같아요. 그런 두 측면의 성격이 있는데 짜임새 있게 조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한국판 뉴딜을 밀고 나갈 동력의 문제, 추진력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계획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정책의 동력은 시장에서 나와야 하는데, 과연 한국판 뉴딜을 밀고 나갈 동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읽히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사회 고용안 전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밀고 가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방법론 면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판 뉴딜 밀고 나갈
시장의 동력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노사정 사회적 협약 최종합의안 추진 불발, 앞으로의 과제는

정흥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노위 밖에서 사회적 대화를 했습

니다. 그래서 합의가 잘 만들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이 내부 추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추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주안점으로 둘 게 뭔지 등을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흥근 어제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임시대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됐죠.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의원 1,479명 가운데 1,3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 89%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것, 그리고 499명이 찬성해서 39%, 805명이 반대해서 61%, 4:6 정도로 찬반이 갈렸다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사회적 대화의 역사에 있어서 7월 23일 임시대대, 또 그 이전 4월에 민주노총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부터 해서 40여 일간 집중적으로 교섭하고, 이후에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민주노총의 추인을 둘러싼 진통과정이 어떤 식으로든 기록이 되고 평가가 되겠죠. 저 나름대로는 한국 사회적 대화의 한 걸음 진전으로 보고요. 그러한 과정을 주도해왔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용기와 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합의와 추인을 둘러싼 과정들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요. 따라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잠정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물론 양대 노총이 다 함께 조인하면 더 좋았을 거지만, 6월 30일까지 이룬 합의안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전히 노사정 간 신사협정으로서의 효력은 가지고 있고, 그러한 수준의 합의의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 추인 과정에 참여한 모든 경제사회 주체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 공이 다시 경사노위로 넘어 온 거죠. 경사노위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생

각합니다. 이번에 4월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진지한 고민을 집약해서 내놓은 결과물을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민주노총이 임시대대에서 추인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경제사회 위기 극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방식의 노정 협의나 필요하다면 산업·업종,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나 교섭이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잠정합의안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정치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도, 사용자단체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모두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우리가 사회적 대화라면 마치 중앙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좌절된 건 중앙 수준에서 대타협, 즉 빅딜이 최종적으로 민주노총 임시대대에서 추인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전히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사회적 대화의 기회와 문은 열려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성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문을 최근에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합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서 아쉽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장 박사님이 말씀하셨듯 상당한 진전이지 않나, 최소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노사정 간 합의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논의 과정 속에서 합의문을 만들었잖아요. 경사노위 입장에서 보자면 합의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경사노위로 들어오면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서 출발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진전해 갈 것이냐가 남은 거죠. 노사정 합의를 없던 것처럼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소모적이죠. 경사노위도 출발점을 확인했으니까 진전해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건호 사회적 대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의제를 세팅하는 거고, 실제로 그걸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봐요. 세팅이 적절하고 사회적 에너지가 모아지면, 법적인 의사 결정권이 없더라도 행정부나 의회가 사회적 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좋은 방안은 대표 기관들, 특히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합의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안 된 것이 아쉽고, 어떻게 하든 여러 영역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최선의 길을 가지는 못 했지만, 차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사회적 대화의 본질은 의제 세팅과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의제 세팅은 지금 났다고 봐요. 그러면 다음은 의제들이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경사노위에서 진행될 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회에서도 결과만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고, 계속되는 논의 과정 속에서 논점을 명확히 하고 공론화 시키고 의견을 수렴해야죠. 사회적 힘을 모으는 과정이니까. 그게 차선의 길입니다. 의제들이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고,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힘을 받을수록 다시 최선의 모양이 복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남은 과제들

정흥준 경사노위가 여러 과제를 안게 됐고 수용을 잘 하면 될 것이라 제안해주셨고, 또 민주노총이 결과로서 추인을 못했지만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프로세스, 그 부분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제보다는 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나가서 사회적 대화를 발전시키면 된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현황들, 정부 차원의 대응들, 또 사회적 대화까지 쪽 살펴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제에 좀 더 집중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고 액션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강조해주고 싶은 것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건호 코로나 재난으로 더욱 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 계층, 취약자들이 부각 됐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불안정 취업자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힘이 쏟아져야 한다고 봐요. 그건 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문제, 노동권의 문제, 사회안전망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흥근 지금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사회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위기감은 실제에 비추어 볼 때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락다운, 봉쇄도 안 하고 경제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마이너스 성장은 필지의 사실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나 기업이나 노동계 할 것 없이, “우리가 여전히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인식, 위기감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동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87년 이후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동운동은 저항의 주체로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노동체제를 무너뜨리고 저항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의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라든가 노사관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서 형성주체로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철성 경제위기 상황이 얼마나 같지는 알 수 없는데, 빠르면 올해나 내년부터 좋아질 수도 있겠죠. 사회적 대화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경제위기 상황이 노사 간에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대립의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협력의 기회가 된다는 건 둘 다 힘드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힘드니까 네가 희생해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헤쳐 나가느냐가 앞으로 한국사회의 노사관계를 포함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뭉쳐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훨씬 더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고, 반대로 대립의 양상이 드러나서 서로 상처 받고 힘들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사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책임은 경사노위에 있다 보니까, 결국 극복하는 모델을 경사노위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근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여러 담론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시장의 약화나 퇴보, 국가의 귀환 등의 담론이 나오고 있는데 20세기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교대로 반복돼온 건 사실입니다. 1980년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은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었고, 그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차 타격을 받았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다시 한 번 위기 상황이 재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국가의 귀환이나 큰 정부, 이런 식으로 헤쳐 가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시장 실패와 아울러, 그 이전에 신자유주의가 득세할 수밖에 없었던 복지국가의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모델을 찾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국가나 시장이라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넘어서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강점으로 부상한 건강한 시민사회, 저

는 1987체제의 큰 성과 중 하나가 건강한 시민사회라고 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흥준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